

‘박사방’ 처벌가능 유료회원 얼마나?

신분 감추려 여러 닉네임 사용해...실제 수백명 수준 관측

경찰, 닉네임 휴대전화개통과 암호화폐송금 이력 추적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미 특정한 1만5000건의 닉네임 가운데 어느 정도가 처벌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최근 자수한 박사방 유료회원 3명을 포함해 이미 검거된 박사방 운영진 14명,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까지 박사방 가담자로 모두 18명의 신상을 확

인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박사방 관련한 닉네임은 1만5000건. 다만 이게 1만5000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의로 변경가능하고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있으나, 사용자 식별 자료 중 비교적 확인이 가능한 것이 닉네임이므로 전체 가담자 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뉴스1) 취재 결과 텔레그램 비밀방 등에서 하루에도 닉네임을 3~4차례 이상 바꾸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홍보

방’으로 불리는 채팅방에는 ‘대포폰, 대포 유심(USIM), 선불 유심, 예그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20~30회 가량 올라왔다. 동일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닉네임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확보된 닉네임과 휴대전화 개통이력, 암호화폐 송금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즉시 검거 가능한 인원이 특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이 수백명 이상 될 것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특정해 말해 드릴 수 없으나 최대한 쫓고 있

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등의 송금 계정과 계정주의 실제 이용 내역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지갑을 분실했다’거나 ‘박사방 입금자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같은 컴퓨터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한다’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나갈 구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씨와 가담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발표했다.

자수자가 늘수록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 남아있는 가담자 등의 정보가 늘어나 전체적인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수시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는 점도 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자수 발표는 n번방, 박사방 가담자에게 일정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디지털 의의를 통해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는데, 주저하는 참여자에게 일정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추가 자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호기심에 트위터·텔레그램상 아청 파일(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구매해 봤다. 어떻게 자수하면 좋겠느냐’ 등을 묻는 질문이 1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신봉우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간소하게 치러진 신입검사 임관식 1일 오후 정부과관청사 법무부에서 신입 검사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박사방’ 자수 20대 “‘70만원 입장’ 2단계 회원이었다”

“모두 처벌” 청원 이틀만인 지난달 12일 동대문경찰서 자수 경찰 “자수해도 수사 잠작 없어...원칙 따라 엄정 수사”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던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3명 중에는 20대 회원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한 가담자를 검거하고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자수한 유료회원 3명 중 1명은 지난달 12일 서

울 동대문경찰서에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나머지 2명도 서울 지역 경찰서에 같은 내용을 털어냈다.

동대문경찰서에 자수한 20대는 자신이 70만원을 가입비로 내야 하는 박사방 2단계 회원이라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원이 자수를 한 것은 지난

달 10일 ‘박사방’ 이용자들을 모두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상대로 1차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를 해도 수사에서 잠작되는 부분은 없고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수 피의자의 자세한 신원은 자진신고가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을 지난달 검거·구속하고,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개를 확인한 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박사방 가입자를 주변 조주빈과 공범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찰은 자수하는 회원들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 4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 단신 ●

고사리 채취 실종 제주 70대, 11시간 만에 발견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실종된 70대 여성이 실종 신고 약 11시간 만에 발견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3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신모씨(76)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에 따르면 일행 2명과 함께 고사리 채취에 나선 신씨는 31일 오전 11시쯤 일행과 헤어진 후 혼자 남아 작업을 이어갔다. 오후 6시40분쯤 신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자녀는 이후 어머니 휴대폰이 꺼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은 신고 접수 약 11시간만인 1일 오전 10시1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려니목장에서 신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신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레일러 사고 뒤 고속도로 밖으로 굴러 2명 부상

1일 오전 6시5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황간 IC 인근에서 A씨(53?여)가 몰던 승용차가 B씨(62)의 트레일러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트레일러가 도로 밖 농로로 굴러 전도됐다.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이 B씨를 차량에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B씨의 트레일러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붙인 60대 택시기사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합 이사의 몸에 불이 붙인 뒤 달아났다 하루만에 자수한 6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26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 있던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불을 낸 뒤 도주했던 B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화재로 인해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A씨와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업체 통해 불법마스크 800만장 팔아치워

무허가업체를 통해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수백억 수익을 올린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주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전날 마스크 생산 A업체의 대표 B씨(58)를 약사법 위반과 조세채벌법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C를 통해 불법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공급할 마스크 양에 비해 생산을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서 있는 무허가 C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